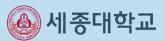
한국현대사의 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13주차. 자유민주주의의 전개 1강. 이승만 정부 및 장면 정부





- 1.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?
- 2. 그 전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?





- 1. 헌법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.
- 2. 그 전개과정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것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1강 이승만 정부 및 장면 정부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자유민주주의란?
- 나는 지금까지 이승만 정부와 장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했는가?

☑ 자유민주주의

➡ 정치적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다양한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





☑ 자유주의

- ➡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 확보
- → 고전적 자유주의, 신(New)자유주의, 사회적 자유주의, 신(Neo-)자유주의



☑ 민주주의

- ➡ 인간 존엄과 평등 강조
- →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, 국민에 의해,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실행하는 주의나 제도, 사상
- ➡ 전제주의와 대립
- ➡ 어원은 그리스어의 'demokratia'로 'demos(국민)+'kratos(지배)'의 합성어
- ➡ '국민에 의한 지배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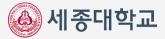


☑ 민주주의

- ➡ 민주주의의 종류에는,
 - : 직접민주주의(다수결의 원칙)
 - : 대의제 민주주의(국민의 대표)
 - : 자유주의적·입헌주의적 민주주의(기본적 인권의 향유)
 - : 사회적·경제적 민주주의(사유재산의 공정한 분배)



- ☑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
 - ➡ 절차에 따라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정부 대표
 - ➡ 국민주권주의 틀 내에서의 의사결정
 - ➡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자유와 권리 보장
 - ➡ 권력기관의 조화와 상호 견제 및 분립 지향
 - ➡ 주권재민, 3권 분립, 국민의 기본권 보호



♥ 통치 및 저항

☑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실천, 실질적으로는 왜곡 내지 무용지물

☑ 장기집권을 위한 두 번의 헌법개정

✓ 3·15부정선거

✓ 4·19혁명



3·15 부정선거

- 3·15 개표 조작
- 1960년 3월 15일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
- 대통령 선거는 후보로 등록한 두 명 중, 한 명이 선거 전에 사망해 사상 최초로 한 명의 후보에 대한 선거로 진행
-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
- 부통령 선거에서는 이기붕 후보가 79.2%의 득표율로 제5대 부통령에 당선

3·15 부정선거

- 이 선거는 부정선거로 밝혀짐
- 부정 선거가 폭로되자 각지에서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 발생
-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 김주열 군의 사체가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4·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음

4·19혁명

- 1960년 4월 19일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 조작
- 이에 반발하여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시위에서 비롯됨
- 전국적으로 확대
- 3·15 부정선거의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실종된 지 27일 후인 4월 11일 아침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왼쪽 눈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오름

4·19혁명

- 4월 19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
- 발포 이후 시위대는 무장하여 경찰과 총격전
- 전 국민적 저항과 군 지휘부의 무력 동원 거부에 대통령 이승만 4월 26일 하야 발표
-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 몰락
- 이 혁명의 결과로 과도정부를 거쳐 6월 15일에 제2공화국 출범

♥ 평가

- ✓ 두 번의 헌법 개정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어긋남
- ✓ 3·15부정선거는 국민주권주의의 틀 내에서의 의사결정과는 전면 배치됨
- ✓ 4·19혁명은, 국가가 보장하지 못한 인간의 존엄성, 개인에 대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일대 도전으로 볼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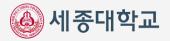


⇒평가

✓ 1950년대 말에 이르러 행정부 독재로 흐르면서 권력기관의 상호견제와 분립이 무너짐

☑ 집권 시기에 따라 자유민주주의가 실천된 적도 있음

☑ 전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왜곡 현상이 지배적



◆ 국정기조

☑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건설

☑ 복지국가 유형론

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

보수주의적 복지국가

🙆 세종대학교

자유주의적 복지국가(liberal welfare state)

-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, 사상·신조의 자유, 경제활동의 자유, 재산권 등 강조
- '국가로부터의 자유'라는 관점에서 보면, 복지에 있어 자조(自助)가 원칙이 됨
- 자조가 곤란한 경우는 사회적인 호혜나 자선활동에 의한 구제 기대
- 국가는 부득이한 경우 긴급 시에만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

자유주의적 복지국가(liberal welfare state)

- 오늘날에는 최저한의 사회보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존재하지 않음
-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하고, 상대적으로 '작은 정부'를 유지하는 미국이나 캐나다도 복지국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
-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정통성이 약함

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(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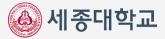
- 사회민주주의란 의회정치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시정하려는 정치 이데올로기
- 특히, 심각한 빈부격차 시정, 노동자의 생활보장 실현
-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이 된 정치 이데올로기
- 복지국가와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종종 동일한 의미로 사용
- 공적인 사회보장·복지제도의 정비가 주요 목표
- 대표적인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북유럽

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(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)

- 높은 조직률을 자랑하는 강력한 노동조합 배경
- 노조를 배경으로 하는 사회민주당 정권
- 정치개입에 의한 재분배 정책 적극 전개
- 시민은 평균적 생활수준의 유지
- 사회보장 정책은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

- ◆ 국정 기조
 - ☑ 장면 정부의 사회경제정책 기조의 이념적 기반은 자유주의
 - ➡ 고전적 자유주의 vs 사회적 자유주의
 - ➡ 고전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유주의 타협("계획성 있는 자유경제")
 - ☑ 국정 기조는 복지국가 건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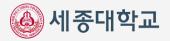
개념적으로 '작은' 정부 지향 :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론 현실적으로 '큰' 정부 지향 :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론



- ◆ 국정 기조
 - ☑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반과 관련하여 개념적 혼란
 - ➡ 경제정책의 이념적 기반은 자유주의
 - ➡ 복지국가론은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론
 - ☑ 복지국가 건설의 한계
 - →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은 높은 노동조합 결성율, 강력한 재분배정책, 충분한 재원
 - ➡ 장면 정권에서는 이런 조건 불충분



- ⇒평가
 - ☑ 헌법에 따라 선출된 합법적인 정부
 - ☑ 국민주권주의 틀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함
 - ☑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에 대한 자유와 권리 보장
 - ☑ 후반기에는 국민주권, 자유·권리를 제한하는 법(반공법 등) 시행



⇒평가

☑ 정부와 집권여당의 정책적 합의 실패로 국정운영의 한계

☑ 장면 정권의 이념적 기반은 자유민주주의, 사회경제적으로는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추구

☑ 개념적 불일치로 자유민주주의도, 사회 민주주의적 복지국가 건설도 추진 어려움



학습정리

-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주권재민, 3권 분립, 기본권 보호 등이다.
- 이승만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전반적으로 그 왜곡 현상이 지배적이었다.
- 장면 정부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국정기조와의 개념적 불일치로 그 전개에 어려움이 있었다.